

평생교육 이념에 기반한 포용적 장애인 평생교육 생태계 구축에 관한 연구: 농촌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A군 사례를 중심으로

한 혜 정 (혜전대학교)

〈 요 약 〉

본 연구는 인프라 부족과 인구 소멸 위기를 겪는 농촌 지자체(A군)를 대상으로 현재 작동 중인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를 진단하고 평생교육 이념에 기반한 포용적 장애인 평생교육 생태계 구축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23명(총 6개 그룹)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담(FGI)을 실시하고 미시적 차원의 주체(학습자)와 거시적 차원의 환경(운영체제 및 거버넌스)을 동태적 생태계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첫째, 미시적 주체 차원에서 농촌 장애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는 ‘노말라이제이션의 실천적 가능성’을 내포하나, 공급자 중심 획일적 프로그램에 따른 수직적 통합 결여와 전담 기관 중심 운영이 자아내는 ‘제2의 시설화’ 장벽과 충돌했다. 둘째, 거시적 환경 차원에서는 부서 간 행정 칸막이와 예산 경직성으로 인한 수평적 거버넌스의 결여, 생애주기 맞춤 자립을 매칭할 전문 전담 인력의 공백 등 구조적 모순이 확인됐다. 셋째,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천 과제로 민·관의 자발적 연대를 제도화한 상설 실무협의체 구축, 일반 공적 공간의 무장애 공유 공간 전환, 전담 코디네이터 배치를 제안했다. 본 연구는 장애인 교육을 평생교육 및 생태계 담론으로 확장하고, 농촌형 대안 모델과 장애인의 ‘능동적 기여자’로의 정체성 전환 가능성을 규명했다는 데 학술적·실천적 의의가 있다.

- 주요어: 장애인 평생교육,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노말라이제이션, 포용적 생태계, 지역사회 거버넌스
-

I. 서론

오늘날 평생교육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보편적 권리로 인식된다. 평생교육의 핵심 이념은 ‘교육의 통합(Integration)’에 있으며, 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수직적 통합과 가정·학교·사회의 유기적 연계를 의미하는 수평적 통합을 전제로 한다(Lengrand, 1970). 유네스코(UNESCO)는 들로 보고서를 통해 ‘함께 살기 위한 학습(Learning to live together)’을 강조하며 교육을 통한 사회적 공존과 포용적 가치 실현을 피력해 왔다(유네스코 21세기 세계교육위원회, 1997). 이러한 보편적 학습권 담론은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 보장으로 확장되어야 하나, 한국의 장애 성인은 특수교육과 일반 평생교육의 경계 밖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그동안 장애 성인 평생교육은 주로 학력 보완이나 기능 중심의 단기 훈련에 치우쳐 있어, ‘배제에서 포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할 실질적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강순원, 2013).

2016년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이 명문화되고 행정적·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으나(김기룡·이경준, 2017; 김두영·박미진·정진숙, 2016), 실제 실천은 일반 평생교육 체제와의 유기적 융합보다 장애인을 분리·격리하는 특수화의 한계를 보인다(양병찬, 2017). 교육부 중심의 평생교육 행정 부서와 보건복지부 중심의 복지 부서 간 행정적 칸막이는 책임 전가와 중복 투자를 야기하여 전달체계의 모순을 유발하였다. 또한 3년 한도 국비 매칭이나 단기 공모사업에 의존하는 경직된 재정 구조는 공급자 중심의 일회성 프로그램을 양산하여 평생교육 생태계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권재현·이정복·윤미경, 2020; 권정숙·정여주, 2015; 김원호·박지석, 2024; 백종면·김영표, 2019; 이지수, 2019).

이처럼 행정적·예산적 칸막이로 수평적 통합이 결여됨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은 복지관이나 거주시설 등 복지 영역 내 전담 기관을 중심으로 분리 운영되는 공간적 한계를 지닌다(이지수, 2019; 조창빈·김두영, 2020). 이러한 시설 중심 운영은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물리적·사회적으로 격리하여 ‘제2의 시설화’를 초래한다(강순원, 2013; 이지수, 2019). 이는 장애인이 비장애 시민들과 일상적 공적 공간을 공유하며 보통의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노말라이제이션(Normalization)¹⁾ 이념, 사회적 역할 가치화(SRV: Social Role Valorization) 철학, 그리고 개별화 평생학습 계획(ILP: Individualized Lifelong Educational Plan)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원칙 및 UN 장애인권리협약의 포용적 가치 권고와 전면 배치된다(김은하, 2019; 신운

1) ‘Normalization’은 주로 ‘정상화’로 번역되어 왔으나, 이는 장애인을 인위적으로 비장애인 기준의 ‘정상’ 상태에 맞춰 개조·적응시켜야 한다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 본 개념은 장애인이 마주하는 환경과 일상적 삶의 수단 및 목적을 보편적 사회 양식에 들어맞게 구성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에 본 연구는 용어가 지닌 학술적 가치를 올바르게 구현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고자 원음 표기인 ‘노말라이제이션’으로 표기하였다.

희·박경옥, 2021; 이향란, 2025; Nirje, 1969; United Nations, 2006). 나아가 현장의 교육 내용도 단순 여가선용이나 취미생활 지원 차원에 안주함으로써 교육 성과가 학습자의 고용, 복지, 실질적 자립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기능적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전달체계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학계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협력 네트워크에 관한 논의를 다각도로 추진해 왔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참여 경험(김수연·김남숙, 2025), 일반 평생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 통합체계 구축(권재현·이정복·윤미경, 2020), 지역사회 다분야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김은하, 2019), 일반·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김두영 외, 2019; 조창빈·류재연·김두영, 2019), 비장애 학습자와의 통합 학습을 통한 인식 개선(백예은 외, 2025) 등에서 협력 네트워크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러나 기존의 네트워크 연구들은 주로 대도시나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을 중심으로 거시적·제도적 당위성을 제시하는 데 치중하거나 기관 간 협력에 관한 단편적 인식 조사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현장의 구체적인 실천 경험이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이나 생태계 혁신이라는 동태적 역동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규명하지 못한 학술적 공백을 지닌다(장오선·전병운, 2018).

이러한 선행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의 역동성을 포착하기 위해, 본 연구는 포용적 장애인 평생교육 생태계 탐색에 초점을 두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관이나 프로그램의 수평적 연결을 넘어 지자체 행정, 평생학습 전담기구, 장애인 복지시설, 민간 시민사회, 그리고 장애 학습자 및 가족이라는 다양한 주체(유기체)들이 지역사회라는 한정된 자원(환경)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지속가능성을 창출해 나가는 동태적 협력 체계를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생태계적 전환의 필요성은 대도시에 비해 행정 자원이 결핍되어 있고 인구 감소와 지리적 고립성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에서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농촌 지자체인 A군을 대상으로 현재 작동 중인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를 진단하고 정책적 과시기 속에서 나타나는 포용적 평생교육 생태계의 미시적·거시적 역동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둔다. 풍부한 인프라 기반의 대도시 중심 선행 연구들과 달리(신윤희·박경옥, 2021; 이하영·임경원, 2019; 주재승·윤지현·김두영, 2016), 연구의 분석 대상인 A군은 자원 고갈이라는 농촌의 전형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동시에 2025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 선정으로 복지관 중심의 분리·시혜적 패러다임에서 지역사회 중심 포용적 평생학습 체제로의 개편을 막 시작한 공간이기도 하다. 즉, 한정된 자원 속에서 민·관 행위자들이 연대하고 갈등하며 새로운 거버넌스를 형성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A군은 체제 전환기적 탐색 사례로서 유의미한 실증적 준거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체제 전환기적 맥락 속에서 포용적 생태계의 역동을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행정·현장의 거시적 운영 체계와 거버넌스 실태를 중심축으로 분석하되, 그 전달체계 속에서 직접적인 교육 주체로 참여하는 장애 성인의 미시적 학습 경험과 내재적 성과(노말라이제

이션의 실천 양상)를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장애 당사자의 미시적 경험 과정에서 도출되는 내재적 성과와 실천 가능성은 현행 공급 체계의 실질적인 실천 양상을 투영하는 지표이자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포용적 평생교육 생태계를 재설계해야 하는 당위성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체들의 미시적 학습 경험과 거시적 구조 실태를 같이 분석할 때 비로소 지역 현장에 안착 가능한 실천적 과제와 전략이 도출될 수 있다.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지역 장애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에 따른 내재적 성과는 어떠하며, 이들의 학습 경험이 자아내는 노말라이제이션의 실천적 가능성은 무엇인가?

둘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의 전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인식하는 운영체제 및 거버넌스의 실태는 어떠한가?

셋째, 농촌형 장애인 평생학습도시가 지속 가능한 포용적 생태계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실천적 과제는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장애인 평생교육의 철학적·이념적 기반

1) 평생교육의 통합 원리와 보편적 학습권

평생교육 이념은 거시적 차원에서 인간의 발달 단계에 따른 수직적 연속성(연령의 통합)과 가정·학교·지역사회를 잇는 수평적 연계성(기능적 통합)의 유기적 결합을 의미하는 ‘교육의 통합(Integration)’을 지향한다(Lengrand, 1970). 그러나 한국의 교육 전개 과정에서 특수교육은 학령기 의무교육에 집중되었고, 일반 평생교육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우선 구축됨에 따라 장애 성인은 이러한 수직적·수평적 통합망에서 소외되는 구조적 단절을 경험해 왔다(양병찬, 2017). 이러한 단절은 장애 성인의 교육적 공백과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므로, 평생교육은 삶의 궤적이 이어지도록 연속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내 다원적 기관이 협력하는 수평적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직결된다. 평생학습권은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전 생애에 걸쳐 인격을 형성해 나갈 권리이며,²⁾ 국제사회 역시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함께 살기 위한 학습(Learning to live together)’의 가치를 강조해 왔다(유네스코 21세기 세계교육위원회, 1997). 그러나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

2) 교육기본법 [법률 제21608호], 제3조 및 제4조, 2026;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 10호], 제10조, 1987.

교육이 학력 보완이나 단순 기능 훈련에 치우친 실태는 포용적 가치 실현에 한계를 지닌다(강순원, 2013). 따라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장애를 단지 결핍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비장애인과 상호 이해와 사회적 공존을 도모하는 ‘배제에서 포용으로’의 보편적 이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의 이념적 지향: 노말라이제이션, 통합, 포용

장애인 교육 및 복지 패러다임은 역사적으로 노말라이제이션(Normalization), 사회통합(Integration), 그리고 포용(Inclusion)의 3단계를 거치며 심화·발전해 왔다.

첫째, 노말라이제이션(Normalization) 이념은 장애인이 격리된 시설이나 특수화된 환경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비장애 동료 시민들과 함께 ‘보통의 삶(ordinary life)’과 일상적 리듬을 영위해야 한다는 철학적 토대를 제공한다(이향란, 2025; Nirje, 1969; Wolfensberger, 1972). 이는 장애 성인이 시혜적 수혜자에 머물지 않고 가치 있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획득하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역할 가치화(SRV: Social Role Valorization)’ 철학으로 구체화되며, 장애인의 일상성 복원과 주체성 확립을 측정하는 핵심적인 이념적 준거가 된다(김은하, 2019).

둘째, 사회통합(Integration)은 노말라이제이션 이념을 실천적 차원에서 구체화하여 장애인을 물리적·사회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기존의 주류 사회 및 보편적 교육 체제 안으로 진입시키고 조화시키는 핵심 기제로 기능한다(강순원, 2013). 사회통합은 분리주의적 관행을 해체하여 장애 학습자가 비장애인과 동일한 물리적·인적 공간을 공유하고, 교육 참여 기회와 수평적 결합을 이루어내는 것을 일차적 지향점으로 둔다(강순원, 2013; 배영주, 2018). 즉, 사회통합은 장애 성인을 지역사회의 대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주류 환경과의 사회적 교류 및 관계 맺기를 촉진함으로써, 후속 패러다임인 포용적 교육 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결정적인 다리(Bridge)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포용(Inclusion)은 단순한 물리적 진입 및 결합을 넘어 학습자 개개인의 다원성과 차이를 보편적 스펙트럼으로 인정하고, 사회·문화적 조화를 방해하는 구조적 배제 요인 자체를 제거하는 정합적 체제 재설계를 지향한다(배영주, 2018). 포용적 관점에서의 장애인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제를 야기하는 주류 사회의 인식 변혁을 동시에 지향하는 ‘모두를 위한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 for all)’의 특성을 갖는다(강순원, 2013). 이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와 자원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보편적 무장에 생태계 조성을 핵심 가치로 둔다.

이러한 궁극적 지향점인 포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념적으로 ‘노말라이제이션’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작동해야 한다. 비장애인과 일상적 공간 공유, 삶의 주체성 확보, 그리고 보통의 일상성 회복이라는 노말라이제이션의 핵심 가치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구조적 환경 개선을 통한 진정한 의미의 ‘포용’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말라이제이션 이념은 장애인 평생교육이 시혜적 돌봄과 분리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편적 포용성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최우선으로 복원되어야 할 철학적 출발점이자 이론적 지향점이 된다.

2.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와 지역사회 거버넌스

노말라이제이션 이념을 현장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제도적 전달체계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법적 토대는 마련되었으나(김기룡·이경준, 2017), 현행 전달체계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운영 주체와 공간의 분리 및 편중성이다. 장애인 평생교육은 장애인복지관이나 거주시설 등 복지 영역 내 전담 기관을 중심으로 분리 운영되는 경향이 강하여,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제2의 시설화’ 및 일상적 교류 제약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양병찬, 2017; 이지수, 2019). 둘째, 부처 간 역할 중첩과 행정적 분절성이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에 산재한 ‘칸막이 행정’은 예산 집행의 경직성과 서비스 단절을 야기하며, 교육청과 지자체로 이원화된 전달체계 역시 통합적 지원을 저해한다(권재현·이정복·윤미경, 2020; 백종면·김영표, 2019). 셋째, 학습자 중심 지원 인프라 및 정보 체계의 미비로, 지역 내 원스톱 정보 제공 체계가 부재하여 정보 접근성의 제한과 공급자 위주의 프로그램 편중 현상이 나타난다(김두영, 2015).

특히 인프라가 취약한 소규모 지역은 대도시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인해 서비스 접근성과 인프라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조창빈·장철승·김두영, 202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절된 기관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거버넌스의 실질화가 요구된다. 산재한 자원을 조정하고 예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 운영, 실제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로 지정 등이 과제로 제시될 수 있다(조창빈·장철승·김두영, 2023). 무엇보다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 지자체의 경우 다분야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자체·교육청·민간 기관이 전문성과 예산을 공유하는 ‘지역 밀착형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실천적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김은하, 2019).

3. 학습자 주체 형성을 위한 실천 원리: 임파워먼트와 생애주기 맞춤 지원

거시적 거버넌스 구축과 더불어 현장에서는 학습자가 삶의 주체로 서는 자립적 주체 형성(Empowerment) 중심의 실천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 장애 성인 평생교육은 단순한 학력보완을 넘어 인권과 민주적 시민의식, 자립적 삶을 구현하는 교육이어야 하며 이는 내적

갈등 극복과 자기 발견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주체로 성장하는 경로를 포함한다(강순원, 2013). 이를 위해서는 장애 학습자의 행동을 결핍이나 통제의 대상이 아닌, 주체적 발현의 과정으로 재해석하는 관점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은 개인의 기질적·병리적 문제라기보다 환경 및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산물’이자 의사소통 표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김미옥·김고은, 2017; 이향란, 2025). 따라서 단순한 행동 억제가 아닌 실생활 환경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사회적 기술, 그리고 자기결정 능력을 학습하는 지역사회중심교육(CBSE)을 제공할 때 도전적 행동이 완화되고 자율적 사회참여가 촉진된다(이향란, 2025).

학습자 주체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관행에서 벗어나 장애 학습자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가 필요하다(정평강 외, 2019).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다층적 요구를 정교하게 조율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이해관계자 실태조사에 따르면(이현주·정평강·이영선, 2019), 기관과 가족은 개별화된 지원과 전문적 수준의 교육을 강조하는 반면, 장애인 당사자는 평생교육을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적 공간의 확보’로 인식하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요구를 조율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적 기획력과 특수교육적 이해도를 겸비한 전문 인력으로서 ‘장애인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및 전문 강사의 양성·배치가 필수적이며(조창빈·장철승·김두영, 2023), 이들이 복지·고용 등 타 영역과 연계하고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요구된다(이지수, 2019).

Ⅲ. 연구 방법

1. 연구 사례 선정 및 맥락적 특성

본 연구는 인프라 부족과 인구 소멸 위기를 안고 있는 농촌 지자체가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추진 과정에서 직면하는 제도적 장벽과 과도기적 역동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 남서부에 위치한 단일 지자체(이하 A군)를 사례로 선정하여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A군을 연구 대상지로 선정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구조적 자원 고갈의 전형성이다. A군은 전체 인구수가 5만명 미만이며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40%를 상회하여 대외적으로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통계청, 2025; 행정안전부, 2025). 특히, A군은 등록 장애인 비율이 지자체 전체 인구의 약 10%에 달해 지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인구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행정·재정적 자원은

고갈되어 있으나 취약계층을 위한 보편적 평생학습권 보장 요구는 고조된 공간으로서 소멸 위기 농촌의 취약한 생태계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정책적 과도기의 특이성이 존재한다. A군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발판 삼아 비교적 조기인 2025년에 교육부 주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공모 선정되는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이는 기존의 복지관 중심 분리주의적 시혜 돌봄 체제를 일반 평생교육 영역 내의 포용적 생태계로 전환하고자 한 선제적인 행정적 시도이다. 따라서 A군은 기존의 분절된 전달체계 모순과 새로운 평생학습 패러다임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정책적 과도기 공간이다. 이러한 실태 속에서 민·관 행위자들이 어떻게 갈등하고 연대하는지 진단하는 것은 향후 비슷한 위기를 겪을 전국의 농촌 지자체들에게 실증적 준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2.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이해관계자 대상의 표적집단면담(FGI)을 주 방법으로 활용하되 질적 사례연구의 엄밀성을 확보하고 해석의 편향을 방지하고자 자료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FGI를 통해 수집된 핵심 데이터 외에도 공적 기록물, 법령 및 조례, 공공 통계자료 등을 다원적으로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공적 기록물은 A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계획, 사업계획서, 부서 회의록 등이며, 제도적 기반을 검토하기 위해 「평생교육법」과 「A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함께 분석하였다. 이에 더하여 통계청 및 행정안전부의 지역 소멸 위험 지수, A군 등록 장애인 비율 및 연령별 인구 동향 등의 통계 데이터를 확보하여 교차 검증의 준거로 삼았다. 이러한 문헌 및 통계 자료들은 단순히 대상지의 현황을 파악하는 배경 정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FGI 데이터에 나타난 주관적 인식과 맥락을 비교하고 검증하는 해석적 분석 자료로 기능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 수집 구조 하에 본 연구의 FGI 참여자로 선정된 대상은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관련 이해관계자 총 23명이다. 평생교육 전담 조직의 담당자 추천과 의도적 표집을 통해 유형별 장애인(발달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보호자, 기관 실무자, 지자체 정책담당자 총 4개 그룹 관계자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참여자 구성은 <표 1>과 같다. 다만, 소규모 농촌 지역의 특성상 학력, 업무, 직위 등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정보는 참여자들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 및 사전 수집·공개 동의 범위에 따라 최소화하여 범주화된 기본 정보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 구성 및 면담 개요

대 상		성별	연령대	장애유형 및 소속	면담그룹
장애인	A	남	20대	발달장애	①
	B	여	50대		
	C	여	40대		
	D	남	30대		
	E	남	20대		
	F	여	60대	청각장애	②
	G	남	40대		
	H	여	70대	시각장애	③
	I	여	70대		
	J	남	60대	지체장애	
보호자	K	여	50대	발달장애인	④
	L	여	50대		
	M	여	70대		
	N	여	60대		
	O	여	40대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실무자	P	남	60대	종합복지관	⑤
	Q	남	30대	발달장애인단체	
	R	여	40대	시각장애인협회	
	S	여	40대	장애인보호작업장	
	T	여	40대	특수학교	
지자체 전담조직 및 유관부서 정책담당자	U	여	50대	장애인평생교육담당	⑥
	V	여	50대	평생교육담당	
	W	남	40대	복지과 장애인담당	

3. 연구 과정 및 분석

본 연구의 주된 자료 수집인 표적집단면담(FGI)은 2025년 7월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되었다. FGI 면담은 참여자 총 23명을 총 6개 그룹으로 나누었고, 참여자들이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A군 내 독립된 공간에서 그룹별로 약 90~120분가량 진행되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장애 유형별로 3개 그룹(발달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지체장애인)을 구분하여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편의를 제공하였다. 청각 장애인의 경우 수어통역사를 동반하였고, 발달장애인의 경우 인지적 특성을 고려해 재구성한 ‘쉬운 말 질문지’를 활용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시작 전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 자료의 익명성 보장, 자유로운 참여 철회권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았다.

면담은 연구 목적에 따라 사전에 개발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핵심 탐색 주제 중심의 개방형 질문으로 진행하였다. 대화를 시작한 후 참여자의 응답에 따라 꼬리물기 질문을 던져 구체적인 경험을 이끌어내었다. 질문지 구성은 <표 2>와 같다.

〈표 2〉 FGI 반구조화 질문지 구성

영역	집단	주요 면담질문
평생학습 참여 성과	장애인, 보호자	·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동기 및 일상생활·심리적 변화 · 교육 참여를 통한 개인적 경험의 의미와 향후 기대 역할 · 장애인의 학습 참여가 가족 구성원 및 일상 전반에 미치는 영향
운영 및 지원체제	장애인, 보호자, 기관 실무자	· 지역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학습자 요구 반영 수준 · 일반 공적 공간(평생학습관 등) 이용 경험 및 접근성(물리적·심리적) · 현장 프로그램 기획·운영 과정의 실제 및 시스템적 제약 요인
전달체계 및 거버넌스	기관 실무자, 지자체 정책담당자	·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추진 체계 및 유관 기관·부서 간 협력 실태 · 교육의 지속성 및 질적 제고를 둘러싼 행정·재정적 요인 · 현장 종사자(실무자, 강사 등)의 직무 애로사항 및 전문성 발휘 요건
포용적 생태계 조성 요건	공통 (모든 그룹)	· 장애·비장애 통합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개선 과제(공간, 인식 등) · 평생학습 경험의 실질적 자립(일자리 등) 연계를 위한 필요 자원 및 지원 방안

면담 종료 직후 녹음 파일은 전사되었으며, 전사 과정에서 참여자의 개인정보와 소속 기관명은 연구 코드와 알파벳 기호로 익명 처리하여 윤리적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텍스트 데이터 이면에 내재된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 반복적 비교 분석법(Glaser & Strauss, 1967)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인 개방 코딩 과정에서는 전사된 원자료를 한 줄씩 정독하며, A군 장애인 평생교육 현상과 관련된 유의미한 단어나 구절에 개념어를 부여하였다(예: 갈 곳이 복지관밖에 없음, 부서끼리 예산을 미룸 등). 두 번째 단계로는 도출된 초기 개념들을 유사성에 따라 묶어 하위 범주를 구성하는 범주화 및 반복적 비교를 진행하였다(예: 공간적 고립, 획일적 프로그램 → ‘분리주의적 운영 한계’로 통합). 마지막 세 번째 핵심 주제 도출 단계에서는 앞서 구조화된 하위 범주들을 통합하고 추상화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상위 범주(예: 제2의 시설화 장벽, 수평적 거버넌스의 결여 등)와 실천 과제를 도출하였다.

4. 연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확보

질적 연구의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 첫째, 데이터의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 표집의 구체성과 다각화를 도모하였다. 이를 위해 A군 장애인 평생교육 생태계 내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유형별 장애인, 보호자, 현장 실무자, 지자체 정책 담당자 등 총 23명의 핵심 이해관계자를 의도적 표집하여 표적집단면담(FGI)을 실시하였으며, 각 집단의 데이터를 교차 분석하여 현상을 입체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둘째, 코딩 및 범주화 과정에서 데이터 해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평생교육 전공 박사) 1인과의 교차 코딩 및 일치도 검증 절차를 거쳤다. 분석의 엄밀성을 높이기

위해 전사본 중 30%를 무작위 추출하여 독립적으로 코딩을 진행하였으며, 초기 코딩 일치도는 87%로 나타났다. 이후 10년 이상 경력의 특수교육 분야 현장 전문가 1인이 참여하는 검증 회의를 통해 범주 정의를 재조정하고 지속적인 논의와 교차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최종 94%의 코딩 일치도를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해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편견 개입을 방지하고 도출된 분석 틀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점검하였다. 셋째, 연구 결과를 서술함에 있어 면담 참여자들의 생생한 육성과 맥락적 언어를 직접 인용구로 제시하는 풍부한 기술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 현장의 실재감을 살리고 분석 결과의 사실성을 한층 높이고자 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장에서는 농촌 지역인 A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미시적 주체 차원과 거시적 환경 차원 간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생태계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습자의 주체적 성장이라는 미시적 성과(노말라이제이션)에도 불구하고 행정 칸막이와 분리주의적 공간 운영이라는 구조적 장벽이 생태계의 선순환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실태 진단 및 생태계 조성 요건을 종합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연구 결과 종합

생태계 차원	상위 범주(대주제)	주요 분석 내용
미시적 주체 차원	1. 장애인 평생학습의 성과와 노말라이제이션의 실천적 가능성	· 자아효능감 형성 및 입파워먼트를 통한 사회적 역할 발견 · 단조로운 일상 회복 및 정서적 제3의 공간으로 기능 · 가정의 사적 돌봄 부담 완화 및 공적 영역 내 포용적 사회적 지망 형성
거시적 환경 차원	2. 운영 및 지원체제: 노말라이제이션 지연과 다차원적 배제	· 비용 효율성 중심의 획일적 운영으로 학습자 맞춤형 설계 한계 · 심리적 안전망 제공과 동시에 지역사회 재분리를 낳는 ‘제2의 시설화’ 모순 · 물리·시간·정보의 폐쇄성 및 제도의 경직성에 따른 학습권 제약
	3.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전달체계의 분절성과 수평적 통합의 한계	· 부서 간 행정 칸막이로 수평적 거버넌스 부실 · 하향식 예산 지침 및 단기 공모사업으로 민·관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와해 · 평생교육-복지 간 전문인력 교류 부재 및 지역통합 강사 양성·관리 체계 공백
선순환 및 지속가능성 차원	4. 포용적 생태계 조성 요건: 평생교육 핵심 이념에 기반한 실천과제	· 민·관의 미시적·자발적 연대 모델(로미 사례)의 제도화 · 전달 코디네이터 배치를 통한 학습-일자리-생애주기 맞춤 매칭 · 일반 공적 공간의 무장애 공유 공간 전환 및 심리적 장벽 해체 · 장애인의 ‘능동적 기여자’ 정체성 전환을 통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1. 장애인 평생학습의 성과와 ‘노말라이제이션’의 실천적 가능성

1) 수혜자에서 주체로: 자아효능감 형성과 사회적 역할 발견

면담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평생교육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이를 무대에서 증명하는 과정에서 강한 자아효능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기능 습득을 넘어 손상된 능력을 상쇄하고 능동적 주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임파워먼트’의 과정이었다.

내가 모르는 거 배웠을 때 남 앞에서 다른 사람 알려줬을 때 자신감이 생기고 너무 좋았어요(청각장애인 G).

우리가 오카리나를 배워 가지고 저런 우리 A군에서 행사 같은 거 있으면 특별 출연으로 무대에 올라가서 오카리나 연주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긍지가 너무 좋아요. 하늘을 날아가고 싶은 기분이예요(시각장애인 H).

나아가 장기 학습에 참여해 온 장애 당사자들은 일시적인 여가를 넘어 작가나 바리스타 등 고유한 사회적 정체성을 확립하며 지역사회 내 대등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통로를 발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분들은 이제 배우는 단계가 아니라 그냥 작가예요. 오시면 본인이 늘 사용하는 재료가 있고 자기 스타일과 취향에 맞춰서 본인이 알아서 작업하시고(기관실무자 Q).

바리스타 자격증처럼 아르바이트나 취업으로도 이어서도 할 수 있고...(중략) 좀 다양하게 앞으로의 그런 노후와 진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되면은 좋겠어요(청각장애인 F).

결과적으로 농촌 장애인에게 평생학습은 의존적 수혜자라는 낙인에서 벗어나 주체적 삶을 영위하게 하는 동력이었다. 이는 장애 성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격리되지 않고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노말라이제이션의 실천이자 학습 성과가 사회적 역할 가치화로 연결되는 구조적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이들의 구체적인 학습 경험은 삶의 취약성을 내재적 역량으로 전환하여 사회적 주체로 안착하게 돕는 실천적 과정으로 볼 수 있다.

2) 고립의 탈피: 단조로운 일상의 회복과 정서적 제3의 공간

학령기 의무교육이 끝난 후 갈 곳을 잃고 무기력해지기 쉬운 장애 성인들에게 평생교육 기관은 단순한 학습장을 넘어 단조로운 일상을 타파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제3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정기적인 프로그램 참여는 외출을 위해 스스로를 단장하게 하

는 등 삶의 규칙적인 리듬을 만들어주는 동력이었다. 나아가 평생학습 현장은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 누적된 돌봄의 압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일상의 억압으로부터 숨을 쉴 수 있는 정서적 해방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안 보이니까 평소에 활동을 잘 못 하잖아요. 그래도 프로그램이라도 나간다고 하면 이제 씻기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기분이 좋잖아요.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시각장애인 I).

이제 하나의 일상생활이 된 거예요. 삶의 한 부분이 된 거죠. 의례 토요일 오전에는 미술 활동하는 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내내 쉬지 않고 오고(기관실무자 S).

이처럼 농촌 장애 성인에게 평생학습 공간은 사적 울타리를 넘어 무기력한 삶의 규칙적인 리듬을 복원하는 제3의 공간이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속되는 정기적인 학습 의례는 가정 내 고립을 탈피하여 동료 시민들과 상호작용하는 끈끈한 매개가 되고 있다. 이는 평생학습이 단편적인 교육 서비스를 넘어 농촌 지역 장애인의 정서적 안정을 보장하고 사회적 연결감을 회복시키는 포용적 정서망의 지지 기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확장의 경험: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와 사회적 지지망 형성

평생학습은 장애 당사자의 개인적 성장을 넘어 가족 공동체가 마주해 온 만성적인 우울감과 돌봄 부담을 지지와 자부심으로 치환시키는 구조적 효과도 파생시키고 있었다. 특히 무대 위에서 자녀의 주체적 역량을 목격하는 경험은 그동안 사적 돌봄 구조에 간혀 있던 가족 구성원들에게 지역사회 내에서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하였다.

자기가 그걸 외워서 한 곡을 전부 다 했다는 게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일평생 살면서 죽을 때까지 뭔가를 배우면서 누구하고 교류하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했던 게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발달장애 보호자 L).

결과적으로 농촌의 척박한 인프라 속에서 평생학습은 가정이 전적으로 짊어져 온 사적 돌봄 부담을 분담하는 사회적 대안 거점이었다. 이는 분리 중심의 패러다임을 넘어 장애인과 그 가족이 공적 영역 안에서 보통의 삶을 영위하도록 지지하는 노말라이제이션의 실천이자 고립된 관계망을 복원하는 포용적 생태계로의 실질적 확장 과정으로 볼 수 있다.

2. 운영 및 지원체제: 노말라이제이션 지연과 다차원적 배제

1) 파편화된 요구와 획일적 공급: 학습자 맞춤형 교육 설계의 한계

면담 참여자들은 장애라는 범주 안에서도 장애 유형(발달, 지체, 시청각 등)과 생애주기에 따라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가 다양하고 다층적인 양상을 띠고 있음을 지적했다. 청장년층 지체장애인들은 실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고등 직업 및 실무 교육을 희망한 반면, 발달장애인 보호자들은 비만 관리 등 일상 건강 유지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세분화된 교육 수요가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은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운영으로 개별화 평생학습 계획(ILP) 없이 이질적인 집단을 단일한 행정 범주로 묶어 비용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젊은 분들은 컴퓨터나 자격증 같은 걸 원하고, 우리 같은 노인들은 건강이나 노래 교실 같은 걸 원해요. 근데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으니까 주는 대로. 그리고 기본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좀 깊숙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지체장애인 J).

발달장애인은 반복이 중요하고 인지 수준이 다른데, 신체장애인하고 같이 앉혀놓고 강의를 하면 한쪽은 너무 지루해하고 한쪽은 못 알아들어요. 반을 나누거나 보조 강사가 있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늘 합쳐버리죠(기관실무자 Q).

이처럼 현장은 수요의 다원성과 공급의 획일성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예산 한계를 이유로 이질적인 장애 특성을 간과하는 공급자 중심의 접근은 실질적인 교육 소외를 야기한다. 이는 체계적인 학습 안전망이 부재할 때 공적 공급 체계가 도리어 학습권을 제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궁극적으로 주체적 자립을 지향하는 노말라이제이션의 실현을 지연시키는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 장애인 전담 기관 교육의 양면성: 일반 공간 진입의 심리적 문턱

현재 A군의 장애인 평생교육은 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부모회 등 ‘장애인 전담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전담 시설은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돌봄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면에는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다시 분리하여 비장애인과의 교류를 차단하는 또 다른 물리적 장벽을 초래한다는 비판적 양면성이 존재한다.

다들 복지관을 왜 가냐면 편안하고 안전하니까. 근데 그러면 또 이 지역사회 안에서 비장애인 장애인도 함께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공간에서 장애인 비장애인이 사실은 더불어서

함께 이걸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기관실무자 P).

복지관 안에서만 하는 교육은 편하긴 하죠. 하지만 거길 나가는 순간 다시 장애인으로만 남아요. 비장애인들하고 섞여서 배워야 진짜 사회에 나오는 건데 지금은 섬처럼 갇혀 있는 기분이예요(지자체 정책담당자 U).

나아가 장애인들이 일반 평생학습관이나 보편적 공적 공간으로 나와 통합 교육을 실현하고자 할 때 이들은 과거의 차별 경험으로 인해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호소하였다. 결국 장애인들은 스스로를 은폐하거나 분리된 공간에 머무르려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반 사람들 많은 데 가면은 좀 위축돼 가지고 자신이 없어요(지체장애인 J).

일반 학교를 보내려고 유치원 다닐 때 상처를 받아서 저도 특수학교를 간 거예요. 장애인 분들만 이용하는 곳으로만 찾아다니니까 차라리 마음은 편하죠(발달장애 보호자 N).

이처럼 지역의 장애인 전담 기관 중심 공급 체제는 단기적인 안전망을 제공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배제를 영속화하는 ‘제2의 시설화’의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다. 전담 공간의 편안함 이면에 존재하는 사회적 단절과 일반 공적 공간의 비장애중심주의적 시선은 장애 성인의 사회적 통합을 가로막는 안팎의 벽으로 작용하였다.

3) 다차원적 배제: 물리적·시간적 제약과 소외를 낳는 폐쇄적 정보망

접근성의 결여는 단순히 지리적 여건을 넘어 물리적 공간, 시간, 정보 유통의 차원으로 다차원화되어 나타났다. 공공 평생학습 시설이 외형적으로는 무장애 환경을 표방하더라도 실제 세부 공간은 휠체어 회전 반경조차 확보되지 않는 등 미흡한 설계로 인한 물리적 장벽이 여전했다. 또한 대다수 프로그램이 행정 편의적인 낮 시간대에 편중되어 개설됨으로써 경제 활동이나 직업 훈련을 하는 장애 성인들은 학습 기회로부터 배제되고 있었다.

교육센터 4층인가 방음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방음벽 문이랑 이런 걸 같이 세팅한다고 했을 때 방은 두께가 있잖아요. 더 좁아진 거예요. 휠체어가 못 들어가요(기관실무자 P).

버스는 있어요. 복지관 버스.. 근데 계단이 너무 높아요. 새로 바뀌었는데 이게 어르신들도 힘들어 하더라고(발달장애인 B).

특히 기존 등록 회원에게만 폐쇄적으로 공유되는 정보망은 미등록 장애인과 사각지대의

당사자들을 이중으로 소외시키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다차원적 배제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고 스스로를 체념하게 만드는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졌다.

저 여기서 지금 한 6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몰랐어요. 한 번도 그런 정보를 듣지도 못했어
요(청각장애인 G).

장애인이 오면은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청소년 시기에도 여기 내가 있을 곳이 아닌
어떤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발달장애 보호자 K).

결과적으로 현장은 미흡한 시설 설계와 폐쇄적 운영으로 인해 일상적 소외를 낳고 있었다. 이러한 다차원적 결핍은 공적 참여를 저해하는 장벽이 된다.

4) 지원 제도의 모순: 행정 규정에 가로막힌 불안정한 학습권

평생학습을 향한 내재적 열망이 존재하더라도 필수 지원 인력(수어 통역사, 활동 지원사) 제도의 경직성은 완강한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장애 성인의 실질적인 학습권은 주체적 선택이 아닌 지원 인력의 법정 근무 시간과 행정 규정에 일부 종속되는 구조적 모순을 보였다. 예를 들면 야간에 개설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해도 보조 인력이 오후 6시에 퇴근하면 이동과 의사소통이 차단되어 원천적으로 수강이 불가능했다. 또한 청각장애인의 경우 외견상 신체 활동이 가능해 보인다는 행정적 기준 탓에 활동지원사가 배정되지 않아 학습을 위한 공간 이동에 제약을 겪는 등 제도의 사각지대가 여실히 드러났다.

6시 후에도 통역사가 같이 와야 되는데,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6시에 일이 다 끝나니깐요.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청각장애인 G).

안 보이니까 혼자 못하니까 근데 활동 지원사님도 퇴근하시면 우리는 밤에는 절대 한 발자
국도 못 움직여요.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시각장애인 I).

이처럼 일상생활 지원에만 치중된 기존 복지 제도는 장애인의 교육 접근성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장벽이었다. 보조 인력의 공백과 제도 운영은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이 독립된 기본권이 아니라 행정 규정에 종속된 부차적 권리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3.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전달체계의 분절성과 수평적 통합의 한계

1) 부서 간 행정 칸막이: 현장 실무자들의 정체성 혼란

평생교육법 개정 이후 장애인 평생교육은 지자체의 평생교육 및 복지 부서와 교육청의 특수교육 부서 등 유관 부서 간의 긴밀한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농촌 현장에서는 책임과 예산을 둘러싼 행정적 장벽이 여전히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부족한 농촌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신청하거나 예산을 집행할 때 각 부서가 자신들의 목적 예산만을 고집하거나 타 기관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사업 신청을 하려고 하면 시청은 교육이니까 교육청에 물어보라고 하고 교육청은 성인 평생교육은 지자체 소관이라고 해요. 예산 주체도 명확하지 않고 서로 떠넘기니까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집니다(기관실무자 R).

군 전담부서와 유관부서가 모이긴 하지만 각자 자기 부서 돈 쓰는 법만 이야기해요. 우리 지역처럼 인프라가 부족한 곳은 돈을 합쳐서 크게 하나를 만들어야 하는데 칸막이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게 제일 답답하죠(지자체 정책담당자 U).

이러한 부서 간의 책임 떠넘기기와 분절된 행정 전달체계는 결국 현장 실무자들의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진다. 부서 사이에서 명확한 지원 체계가 확립되지 않다 보니, 농촌 지역의 장애인 평생교육은 고유의 교육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채 기존 복지 서비스의 테두리 내에서 임시방편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그 결과, 실질적인 교육 혁신이나 통합적 프로그램 기획보다는 기존 장애인 복지관의 돌봄·여가 프로그램 명칭만 ‘평생교육’으로 바꾸어 실적을 채우는 파행적 운영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는 부서 간 협력을 강조하는 수평적 통합 거버넌스가 실제 농촌 현장에서는 얼마나 공허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실무자들이 교육과 복지의 모호한 경계 속에서 어떻게 방향성을 잃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2) 경직된 예산 지침과 단기 사업 의존: 민·관 파트너십 및 협력 네트워크 형성의 한계

현장 실무자들이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연계하여 양질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할 때 마주하는 큰 장벽은 지자체의 하향식(top-down) 예산 집행 지침이었다. 성공적인 거버넌스는 참여 기관 간의 유연한 자원 공유와 자율성을 전제로 하지만, 현재의 예산 구조는 강사비 위주로만 고정되어 있어 현장 기관들의 주도적인 협력 모델 기획을 어렵게 하였다. 장애인의 독특한 학습 요구에 맞춰 지역 사회와 연계한 특수 악기 구비나 교구재 공동

활용을 시도하려 해도, ‘자산 취득 불가’라는 경직된 행정적 잣대는 민·관의 수평적 파트너십을 저해하고 민간 기관을 단순한 지침 수행 기관으로 전락시켰다.

약기를 위한 강좌인데 약기를 구입 할 수 없고 그렇다고 개인이 할 수 없는 고가의 약기 같은 경우에는 (중략) 정말 장애인분들의 특수성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 주면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실 수는 없나(기관실무자 Q).

예산도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운영해서 쓸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강사비 위주로 해버리니까. 재료나 기자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렵더라고요(기관실무자 T).

이러한 예산 용도의 제한 못지않게 지역 거버넌스의 신뢰와 결속력을 위협하는 것은 공모사업에 의존하는 ‘단기 사업비’ 중심의 재원 구조였다. 지역 사회 내에서 평생교육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관, 강사, 학습자 간의 장기적인 관계 형성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불과 몇 개월 단위의 지원금이 소진되면 프로그램이 즉각 중단되면서, 어렵게 구축해 놓은 지역 내 인적·물적 네트워크가 순식간에 와해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었다. 단기적 실적 위주의 지원은 유관기관 간의 연대보다는 소모적인 예산 확보 경쟁을 부추겼으며, 전문 강사라는 핵심 지역 자원마저 이탈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예산이 사실은 그렇죠. 강사를 섭외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안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다시 구하기가 힘들어서. 또 다시 1년 뒤에 하면 이분들이 효과성도 없고 지속적으로 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기관실무자 P).

국가에서도 기반 조성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거든요. 국가에서 의지가 좀 있어야 지자체에서 움직이잖아요(지자체 정책담당자 W).

결과적으로 현장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배제한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재정 운영은 지자체와 지역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의 동등한 파트너십 구축을 요원하게 만들고, 나아가 지역 사회 자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다원적 협력 거버넌스의 실현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3) 전문 인력 간 네트워크 단절: 다학제적 협력 부재와 지역 강사 풀(Pool) 연계의 한계

장애인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의 기획력과 복지(특수교육)의 전문성이 결합되어야 하는 융복합적 영역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이질적인 전문가 집단 간의 활발한 인적 네트워크와 정보 교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들을 매개할 소통

창구나 협의체가 부재하여, 각 전문가 집단이 고유의 영역만 고수하는 심각한 인적 자원의 분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평생교육 기관과 장애인 복지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대하지 못하면서, 평생교육사는 장애 특성 이해에 한계를 보였고, 반대로 복지·특수교육 종사자는 성인 평생학습의 관점을 확장하는 데 미흡했다.

평생교육사 분들은 장애를 잘 모르고 특수교사분들은 성인 평생교육의 특성을 잘 몰라요. 둘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커리큘럼을 짜야 하는데, 각자 자기 영역만 고집하니까 프로그램이 매년 똑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죠(기관실무자 T).

장애인들이 와서 활동했을 때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내가 지원하고 케어해야 된다는 인식이 제가 보기에 없어요. 이거 나 몰라 이런 거예요(기관실무자 P).

나아가, 지역 사회 내 인적 자원을 발굴하고 훈련시키는 ‘공동의 강사 양성 거버넌스’가 부재하다는 점도 네트워크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결정적 요인이었다. 가뜰이나 전문 인력 풀(Pool)이 제한적인 농촌 특성상, 기관들은 개별적으로 비장애인 대상의 강의 경험만 있는 일반 강사를 섭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강사들을 지역 단위의 연계망으로 묶어 사전에 장애 이해 교육을 제공하거나 현장 배치를 조율하는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이 없다 보니, 강사와 수강생 간의 마찰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은 온전히 개별 기관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겨지고 있었다.

평생학습은 그냥 일반 자격증을 가지고 그 경험만을 가지고 지원을 하시잖아요. (중략) 저기서는 됐었는데 여기는 잘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기본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기관실무자 P).

처음 한 차시 정도는 강사님과 수강생분들이 라포 형성할 수 있는 OT처럼 그런 시간을 의무적으로는 가지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기관실무자 Q).

이처럼 평생교육과 복지 영역 간의 전문가 네트워크 단절과 지역 차원의 통합적 인력 관리 시스템 공백은 농촌 장애인 평생교육의 질적 도약을 가로막는 인적 장벽이었다. 다학제적 융합을 이끌어낼 ‘인적 거버넌스’가 구축되지 않는 한, 현장의 교육은 학습자의 복합적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과거의 단조로운 돌봄이나 여가 선용 수준에 고착될 수밖에 없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4. 포용적 생태계 조성 요건: 평생교육 핵심 이념에 기반한 실천 과제

1) 교육 자원의 연계와 공유: 지역사회 기관 간 자발적 연대

면담 참여자들은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자체의 특성상 단일 기관의 역량만으로 포용적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A군 현장에서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이 자발적으로 결합한 현장의 연대 모델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발달장애인 미술 동아리 ‘로미’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복지관과 평생교육센터, 자생 동아리가 각각 강사 자원, 학습 공간, 재료를 유기적으로 분담하며 공백을 메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복지관에서 강사 지원을 해 주시고 공간은 평생교육센터 공간을 쓰고 있고 또 재료비는 동아리에서 일부 평생교육센터 지원도 있고 그러니까 동아리하고 복지관하고 여기 평생교육센터 3개가 협력하고 있는 셈인 거죠. 여러 기관이 서로 협력해서 공백이 없이 유지가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기관실무자 Q).

이처럼 A군의 로미 사례는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현장에서 기관 간 장벽을 허물고 실질적인 공백을 메운 의미 있는 시도이다. 비록 상설화된 제도적 거버넌스로까지 성숙하지는 못했으나 민·관의 실무자들이 생존과 인프라 결핍 극복을 위해 상호 동등하게 결합했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지닌다. 이는 하향식·거시적 통합 체계만을 강조하던 기존 담론을 넘어 농촌 지역 실정에 맞춘 미시적 수평적 연대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 자립을 향한 생애 전환: 직업 연계망 구축과 전담인력 배치

현재 문화예술 위주로 편중된 교육 구조를 탈피하여 실제 고용과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직업 연계 심화 교육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강하게 표출되었다. 면담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바리스타나 컴퓨터 활용 등의 교육이 일회성 취미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 및 생애 진로 기반으로 연계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바리스타 자격증처럼 아르바이트나 취업으로 이어서 할 수 있고... 단지 취미나 그냥 일회성으로 배우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고 취업하면 (좋겠습니다)(청각장애인 F).

미술 활동을 통해서 취업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중략) 사업장으로 등록을 하고 전반적인 매니지먼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전담 인력이 있다면 프로그램 한 활동을 통해서 미술 활동으로 취업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기관실무자 Q).

이러한 교육의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직업적 자립과 질적 심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분절된 자원을 엮고 학습자의 생애주기 맞춤형 계획을 관리해 줄 ‘전담 인력(코디네이터)’의 배치가 필수적이다. 평생교육적 기획력과 장애인 복지(특수교육)의 이해도를 두루 갖춘 전담 인력이 개별 학습자의 일자리 매칭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자립을 실현할 수 있다.

3) 포용적 공유 공간 재설계: 일상적 교류를 가로막는 장벽 허물기

면담 참여자들은 장애인을 별도의 전용 시설에 격리하는 ‘제2의 시설화’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공적 공간을 실질적인 무장애 환경으로 정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누구나 제약 없이 이동하는 물리적 장벽의 제거가 통합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이었다. 나아가 이들은 공간을 개조할 때 ‘장애인 전용’이라는 특수한 명분을 내세우기보다 ‘유모차와 노약자’ 등 누구나 이용가능한 보편적 공간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그래야만 장애인을 향한 비장애인의 이질감과 무의식적인 심리적 장벽까지 자연스럽게 해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새로 짓는 것만이 답이 아니에요. 기존 평생학습관 한구석에 장애인들이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비장애인들하고 차 한 잔 마시면서 학습 동아리도 같이 하는 거죠. 그게 진짜 통합이고 비용도 아끼는 길입니다(지자체 정책담당자 U).

휠체어 길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질감을 느끼지만 유모차가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달라고 하면 다들 쉽게 공감해요. 그렇게 (장애와 비장애의) 이질감 없는 공간을 같이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지자체 정책담당자 V).

이처럼 하드웨어 중심의 투자를 넘어 기존 공간의 개방을 통한 소프트웨어식 공간 재설계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보편적 언어를 매개로 물리적 문턱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의 심리적 장벽까지 동시에 허물어야 한다는 요구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농촌 지역의 포용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간 복지가 추구해야 할 실질적인 실천 방향성을 보여준다.

4) 분리주의를 넘어서는 통합 교육: 장애인의 주도적 참여가 이끄는 인식 개선

면담 참여자들은 장애 성인이 단순한 시혜적 수혜자에서 벗어나 평생교육을 통해 획득한 재능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능동적 기여자로 기능할 수 있는 선순환 모델을 희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지역 내 소외된 경로당 어르신들을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신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한 주도적인 봉사 활동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나아가 이들은 기획 단계부터 ‘장애·비장애 통합 프로그램’을 명시함으로써 행정 편의적인 분리주의적 관행을 탈피하고 평등한 통합의 장 자체를 통해 지역사회의 장애 편견을 자연스럽게 교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각장애 안마사들이 안마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경로당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시각장애인 H).

굳이 장애인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가냐면 그렇게 안 하면 장애인이 못 오기 때문이에요. 아예 ‘장애·비장애 통합 프로그램’이라고 달고 시작하니까 비장애인이 많긴 해도 장애인도 같이 포함되어 활동하게 되더라고요(기관실무자 P).

이처럼 하향식 홍보를 넘어 상호 교류와 주도적 참여를 통한 상향식 인식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들이 요구하는 핵심 요건은 고립된 분리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 기여자로 서는 선순환 통합 체계의 구축이다. 결국 장애 당사자의 사회적 임파워먼트와 기획 단계부터의 통합 지향적 접근이 포용적 생태계 안착을 위한 필수 과제임을 보여 준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인프라 부족과 인구 소멸 위기를 안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 지자체인 A군을 대상으로 현재 작동 중인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를 진단하고 정책적 과도기 속에서 나타나는 포용적 평생교육 생태계의 미시적·거시적 역동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총 23명(총 6개 그룹)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담(FGI)을 실시하였으며 평생교육의 핵심 이념을 잣대로 분석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지역 장애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는 강한 내재적 역량 강화를 자아내는 ‘노말라이제이션의 실천적 가능성’을 내포하는 동시에, 분리주의적 공급 체제로 인한 공간적·정서적 배제의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 참여자들에게 평생교육은 단조로운 일상의 리듬을 복원하고 고립을 탈피하게 만드는 ‘정서적 제3의 공간’이자, 수혜자에서 주체적 시민으로 성장을 돕는 임파워먼트의 전환 과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미시적 학습 성과의 내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공급 체계는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이들의 다원화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모순을 보였다. 장애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프로그램은 학습자 맞춤형 다양성의 결여를 낳았고, 복지관 등 분리된 전담 기관 중심의 공간 운영은 비장애인과의 교류를 차단하여 배제를 영속화하는 ‘제2의 시설화’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둘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의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행정 및 현장 이해관계자들은 전달체계의 분절성과 수평적 거버넌스의 결여, 그리고 전문적 매니지먼트의 총체적 공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랑그랑(Lengrand, 1970)의 수평적 통합 원리와 달리 현장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복지기관 간의 견고한 행정적 칸막이와 예산·책임 회피 관행이 작동하고 있었다. 특히 단기 공모사업 위주의 경직된 재정 구조는 농촌 지역의 자생적 거버넌스 구축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걸림돌이었다. 이에 더해, 주체적 자립을 희망하는 학습자들의 열망을 실제 고용과 자립으로 매칭하고 조율해 줄 평생교육 및 복지(특수교육) 융합 역량을 갖춘 전담 인력 체계가 부재하여 교육 성과가 지속적인 생애 전환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을 나타냈다.

셋째, 농촌형 장애인 평생학습도시가 지속 가능한 포용적 생태계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실천적 과제로서 현장의 자발적 연대 모델 고도화, 보편적 공간 재설계, 그리고 참여형 선순환 체계 확립이 요구되었다. 이는 자원 고갈 상태인 농촌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하향식 제도 구축을 넘어 민·관 실무자가 상호 동등하게 결합하는 거버넌스 혁신과 장애인을 ‘능동적 기여자’로 탈바꿈시키는 주체적 자생성 확보를 핵심 요건으로 한다.

이처럼 본 연구 결과는 행정, 예산, 기관, 프로그램의 단순한 나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시적 차원의 주체(학습자)와 거시적 차원의 환경(운영체제 및 거버넌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얹혀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창출하는지 입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생태계적 실태 진단’의 성격을 갖는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선행 연구들과의 학술적 연속성과 차별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장애인 평생교육 법제화 이후에도 전달체계의 분절성과 고립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선행 연구들의 실태 진단과 학술적 연속성을 가진다(강순원, 2013; 권재현·이정복·윤미경, 2020; 이지수, 2019). 특히 최근 수행된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및 네트워크 관련 연구들(김수연·김남숙, 2025; 김주영, 2020)에서도 꾸준히 지적되듯, 복지 영역 내 전담 기관 중심의 파편화된 운영이 비장애인과와의 일상적 교류를 가로막는 ‘제2의 시설화’를 초래한다는 점은 A군 사례에서도 고스란히 재확인되었다. 또한 부서 간 행정 칸막이와 단기 공모사업 의존성이 생태계의 지속성을 해친다는 한계 역시 최신 연구들(김수연·김남숙, 2025; 이인재·강병노·남세현, 2025)에서 지적된 바와 일치한다.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구별되는 본 연구의 차별성은 인구 소멸 위기와 인프라 결핍을 겪고 있는 농촌 공간(A군)의 특수성에서 비롯된다. 먼저 ‘전달체계 구축의 동력’ 측면에서 풍부한 인프라를 전제로 하향식 거버넌스를 강조했던 대도시 중심의 선행 연구들과 달리(이하영·임경원, 2019; 주재승·윤지현·김두영, 2016), 본 연구는 자원이 결핍된 농촌 현장에서 민·관 실무자들이 생존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합하여 공간과 예산을 분담하는 ‘미시적·수평적 연대 모델(로미 사례)’을 실증했다. 이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지역사회 연계 및 민관 협력망 구축을 다룬 최근 연구(이인재·강병노·남세현, 2025, 이향란, 2025)의 제언을 농촌 현장의 구체적인 수평적 연대 가능성으로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장애 학

습자의 역할과 정체성 인식' 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기존 연구들이 대개 장애인을 수동적 수혜자나 시혜적 복지의 대상으로 바라본 것과 달리 A군 사례에서는 평생학습을 통해 역량을 형성한 장애인이 지역 내 다른 소외계층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능동적 기여자'로 성장해 나가는 역동성을 포착했다. 이는 장애인의 사회적 역할 가치화(SRV) 철학이(김은하, 2019) 농촌 공동체의 상호 돌봄 및 공생 전략과 결합할 때 단순한 복지·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주체-환경 간 선순환을 이끄는 자생적 생태계 담론으로 격상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A군의 포용적 장애인 평생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A군 장애인 평생학습 상설 실무협의체' 구축과 자원 공유 체계의 마련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민·관의 자발적 연대 모델(로미 사례)은 농촌 현장의 실무자들이 스스로 형성한 '상상적·수평적 거버넌스'의 원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를 공식 거버넌스로 제도화하여 지자체, 교육청, 민간 복지기관 간의 행정적 칸막이를 허물고 권한과 예산을 공유하는 통합 거버넌스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 일반 평생학습 시설의 무장애 공유 공간 전환 및 통합 교육 전면화이다. 노말라이제이션 이념을 공간과 프로그램 영역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공간 재설계가 동반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을 분리된 전용 시설에 수용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일반 평생학습관을 무장애 환경으로 전환하고 비장애인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일상적 융합 공간으로 개방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또한 기획 단계부터 장애·비장애 통합 프로그램으로 운영함으로써 분리주의적 시선을 거두고 평등한 학습의 장 자체가 지역사회의 편견을 해체하는 사회 교육으로 작동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담 전문 코디네이터 배치와 장애인 '능동적 기여자' 중심의 참여형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다. 장애인의 임파워먼트와 사회적 역할 가치화(SRV)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이 단순한 여가선용이나 시혜적 복지 지향의 돌봄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 기획력과 복지(특수교육) 이해도를 겸비한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생애주기 맞춤형 일자리 및 활동 매칭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 나아가, 앞서 확인된 봉사 사례와 같이 장애인이 자신의 학습 성과를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나누며 스스로 수혜자에서 '능동적 기여자'로 정체성을 전환할 수 있도록 참여 중심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연구는 인구 소멸 위험과 인프라 결핍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농촌 지자체(A군)의 초기 실태와 역동을 심층적으로 본 질적 사례연구이다. 본 연구가 지니는 제한점과 이에 따른 후속 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개시되고 체제 개편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환기 시점’의 단면적 실태와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파악에 집중하였다. 이로 인해 연구가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한 통합 실무협의체 구축이나 무장애 공유 공간 개방, 전담 코디네이터 배치 등의 실천적 과제들이 향후 농촌 현장에 실제로 제도화되고 안착하는 장기적인 집행 과정을 추적하지 못했다는 시기적 제한점을 지닌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포용적 대안들이 거버넌스 체계 내에 안착한 이후 실제 농촌 지역 장애인의 자립적 삶의 질 향상과 비장애인 주민들의 사회적 수용성에 어떠한 구조적·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지 그 인과적 역동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질적 종단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오랫동안 특수교육의 연장선이나 사회복지적 돌봄 영역에 머물던 장애인 교육을 통합 원리와 노말라이제이션, 그리고 생태계 담론으로 확장하여 포용적 생태계의 가능성을 규명했다는 데 학술적 의의가 있다. 나아가 인프라 부족과 인구 소멸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촌 지자체들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할 때 직면하게 될 구조적 시행착오를 진단하고 주체-환경 간 상호작용에 기반한 대안적 생태계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참고문헌

- 강순원(2013). 장애성인 평생교육: 배제에서 포용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9(1), 55-84.
- 권재현·이정복·윤미경(2020). 일반 평생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 통합체제 구축의 정책변화과정 영향 요인 분석 - 옹호연합모형(ACF)을 적용하여-. **평생교육학연구**, 26(2), 103-134. <http://dx.doi.org/10.52758/kjle.2020.26.2.103>
- 권정숙·정여주(2015). 지역평생학습사업에서 장애성인 평생교육의 지향점.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5(6), 305-315. <http://dx.doi.org/10.35873/ajmahs.2015.5.6.028>
- 김기룡·이경준(2017). 평생교육법 개정 시행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구축 및 향후 과제.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3(1), 1-30.
- 김두영(2015).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선행연구 고찰. **장애인고등교육연구**, 1(1), 21-41.
- 김두영(2022). 한국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28(3), 229-260. <http://doi.org/10.52758/kjle.2022.28.3.229>
- 김두영·박미진·정진숙(2016). 2016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의 발전 과제. **장애인 고등교육 연구**, 2(2), 175-195.
- 김두영·이병인·이경준·조창빈(2019). 일반 평생교육기관과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에 관한 실무자의 인식 및 요구. **특수교육학연구**, 53(4), 163-184. <http://dx.doi.org/10.15861/kjse.2019.53.4.163>
- 김미옥·김고은(2017).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지원에 관한 쟁점과 전망. **비판사회정책**, 56, 59-94.
- 김수연·김남숙(2025).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참여 경험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31(5), 217-244. <http://dx.doi.org/10.24159/joec.2025.31.5.217>
- 김원호·박지석(2024).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참여 경험 및 발전 방안 탐색 연구.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7(2), 159-179. <http://dx.doi.org/10.20971/kcpmd.2024.67.2.159>
- 김은하(2019). 분야 간 협력을 통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실천 방향에 대한 소고: SRV철학 기반의 실재를 중심으로.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5(2), 1-24. <http://doi.org/10.23359/slewd.2019.5.2.1>
- 김주영(202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체제 모형 개발 연구: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평생교육 복지연구**, 6(2), 1-28. <http://doi.org/10.23359/slewd.2020.6.2.1>
- 배영주(2018). ‘포용적’ 평생교육체제 구축의 의미와 방향 : 장애인 평생학습 필요를 중심으로. **특수교육**, 17(3), 5-27. <http://dx.doi.org/10.18541/ser.2018.08.17.3.5>
- 백예은·이지선·최아름·이종민·김유리(2025). 통합 평생학습 및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 학습자의 인식 조사: A시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31(6), 271-294. <https://doi.org/10.24159/joec.2025.31.6.271>
- 백종면·김영표(2019).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규 및 지원체제의 현황과 과제. **예술문화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1), 859-871. <http://dx.doi.org/10.35873/ajmahs.2019.9.1.085>

- 신윤희·박경옥(2021).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에 참여한 당사자의 참여 현황 및 지원 요구에 대한 인식 조사: 경기도 G시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60(3), 115-140. <http://dx.doi.org/10.23944/Jsers.2021.09.60.3.5>
- 양병찬(2017). 장애인 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시설의 운영방안: ‘함께 배우는 공동체’를 지향하며. **제4회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 학술대회 주제발표 자료집**(pp. 10-21).
- 유네스코 21세기 세계교육위원회(1997). **21세기 교육을 위한 새로운 관점과 전망: 유네스코 21세기 세계교육위원회 종합보고서**(김용주 역). 서울: 오름. (원서는 1996년 출간)
- 이인재·강병노·남세현(2025). 지역연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의 탐색적 모델 연구: 경기도를 중심으로. **직업재활연구**, 35(1), 107-141. <http://dx.doi.org/10.24226/jvr.2025.4.35.1.107>
- 이지수(2019). 장애인 평생교육의 쟁점과 현장의 목소리 - 전북 군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 **평생교육학연구**, 25(1), 55-83. <http://dx.doi.org/10.52758/kjle.2019.25.1.55>
- 이하영·임경원(2019).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국내연구 동향분석: 1998년부터 2018년까지. **평생교육학연구**, 25(3), 1-28. <http://dx.doi.org/10.52758/kjle.2019.25.3.1>
- 이향란(2025). 지역사회중심교육이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완화에 미치는 영향.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11(2), 25-58.
- 장오선·전병운(2018). 장애인 평생교육 질적 연구 동향 분석: 2007년~2018년까지의 국내 학위논문 및 학술지를 중심으로.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4(2), 73-102. <http://doi.org/10.23359/slewd.2018.4.2.73>
- 정평강·이현주·이영선·구정아(2019). 평생교육에 대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요구 탐색. **평생학습사회**, 15(4), 57-82. <http://dx.doi.org/10.26857/JLLS.2019.11.15.4.57>
- 조창빈·김두영(2020).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현황 및 요구. **평생학습사회**, 16(2), 233-259. <http://dx.doi.org/10.26857/JLLS.2020.5.16.2.233>
- 조창빈·류재연·김두영(2019). 일반·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현황 및 방해요인 분석. **평생학습사회**, 15(1), 79-104. <http://dx.doi.org/10.26857/JLLS.2019.2.15.1.79>
- 조창빈·장철승·김두영(2023).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실행과제 도출 연구. **특수교육연구**, 30(1), 1-29. <http://dx.doi.org/10.34249/jse.2023.30.1.1>
- 주재승·윤지현·김두영(2016).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연구동향 분석. **재활복지**, 20(1), 23-42. <http://dx.doi.org/10.16884/JRR.2016.20.1.23>
- 통계청(2025). 통계청 홈페이지. <https://kosis.kr/> (검색일: 2025. 6)
- 행정안전부(2025).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 (검색일: 2025. 6)
- Glaser, B. G., & Strauss, A. L.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Chicago: Aldine.
- Lengrand, P. (1970). *An introduction to lifelong education*. Paris: UNESCO.
- Nirje, B. (1969). The normalization principle and its human management implications. In R. B. Kugel & W. Wolfensberger (Eds.), *Changing patterns in residential services for the mentally retarded* (pp. 179-195). Washington, DC: President's Committee on

Mental Retardation.

United Nations. (2006).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New York:

United Nations

Wolfensberger, W. (1972). *The principle of normalization in human services*. Toronto:

National Institute on Mental Retardation.

교육기본법 [법률 제21608호, 2026. 5. 6 일부개정]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 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저 자 정보

한혜정

Han, Hyejeong

소 속: 혜전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연 락 처: ssam0730@naver.com

연구분야: 지역평생교육,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사회연결망분석

<Abstract>

Building an Inclusive Lifelong Education Ecosystem Based on Lifelong Education Philosophy: The Case of Rural Lifelong Learning City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n County A

Hyejeong Han (Hyejeon University)

This study diagnosed the realities of a rural municipality (County A) transitioning into a disabled lifelong learning city amid infrastructural and population crises, and explored how an inclusive ecosystem can be built here. Focus group interviews with 23 stakeholders revealed: 1) Uniform programming failed to meet life-stage demands, causing a lack of “vertical integration”. 2) Segregated institution-centered education caused “secondary institutionalization,” conflicting with “normalization”. 3) Administrative silos and budgetary rigidity hindered “horizontal governance”. 4) A lack of specialized personnel restricted learners’ “empowerment”. Based on these findings, some practical strategies were suggested: establishing a permanent working-level consultative body, opening everyday convergent spaces through barrier-free facility transformations, and deploying dedicated coordinators. Overall, this research extends disability education into mainstream lifelong education, discovering an alternative rural ecosystem model and illuminating the potential of transforming disabled learners’ identity into becoming “active contributors” within the community.

- **Key words:**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lifelong learning city, normalization, inclusive ecosystem, community governance

접 수 일: 2026. 6. 29

심 사 일: 2026. 7. 16

게재확정일: 2026. 7. 27